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국제경험에 비춘 한국의 현실과 전망*

임현진**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패에 관련된 국내외적 요인들을 비교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주요 요인을 국제적 지평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사회운동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실험의 교훈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론에 대신하여 지적한다.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환되기에 아직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민중당파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 매우 다른 정치지형에서 시도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자 세력화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성공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 기반 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파제는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는 규범적 판단보다,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조적·행위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비록 일제 식민지 공간에서 타율적으로 추진된 자본주의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산실로서 시민사회가 형성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비교사회학, 정치사회학, 사회발전론. 주요저서로 『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2000;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1998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12, E-mail: hclim@plaza.snu.ac.kr)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백이 역설적으로 일제지배에 대한 반식민, 반봉건의 기치아래 자주독립과 인간해방을 위한 광범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출현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오랜 전통은 해방이후 분단 상황아래 민간 및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 과정에서 여러 갈래의 사회운동¹⁾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산업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는 미완의 혁명으로서 4·19 학생의거, 유신 독재체제아래 학생과 노동의 저항과 항거, 1979년의 부마시민항쟁, 1980년의 '서울에 봄'에 이은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직선제 쟁취를 위한 시민항쟁,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개악적 노동법 반대투쟁,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 등이 잘 응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부정권의 퇴진과 민간정권의 등장이라는 외양보다도 언론, 출판, 결사, 사상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함양이라는 내용 면에서 사회운동의 의의를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이 지니는 주요한 특징은 시민도 없고 사회도 없는 곳에서 운동이 '시민권'을 찾아주고 '시민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사회운동이 '시민권을 갖는 시민 있는 시민사회'를 이끌 어내는 데 일조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운동의 전개가 상보적으로 거의 궤를 같이하였던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발 발전국의 경험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그러기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기본권을 향유한 시민이라기보다 그것을 지니지 못한 민중의 기반 위에서 국가와 대치선을 그으면서 권력의 남용과 대의의 변질을 바로잡으려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향한 전망을 공유하면서 민중과 시민, 그리고 급진과 개혁이라는 주체의 성격과 노선의 차이에 따라 때로는 분열되고 때로는 수렴되는 복잡다단한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1)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운동을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운동과 유권자, 소비자 등 시민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운동 조직들을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s)나 혹은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로 통칭할 수 있지만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성향의 차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사회운동은 한국사회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새로운 정당창당에 의한 독자적인 세력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패하기 하였으나,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 민주당이 그 보기이다. 최근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구학생운동권을 모태로 하는 진보진영에서 지난날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녹색당’ 등이 준비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패에 관련된 국내외적 요인들을 비교시각에서 다루려는 데 있다.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운동 경험을 보면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운동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운동의 신구 형태가 발생론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목표와 활동에서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많다. 이는 한국 산업화의 후발성과 민주화의 과행성이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용변수를 여러 가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환경 아래에서 적확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제경험에 비춘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험도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르고 제3세계의 경우도 한국과 중남미의 사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주요 요인을 국제적 지평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사회운동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실험의 교훈을 검토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론에 대신하여 지적할 것이다.

2.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병존

1) 사회운동의 발전 추이와 맥락: 제3세계적 특수성

사회운동이란 “사회변동을 달성하거나 혹은 그것을 저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다중에 의한 운동” (Turner and Killian,

1972: 246)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이러한 사회운동은 제도권 밖에서 변혁을 추동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넘어 제도권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상적 현상이라는 것이 근래의 합의된 결론이다. 실제로 인류역사에서 노동, 농민, 빈민운동과 같은 구사회운동이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넘어 일반 대중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확립에 기여하였듯이, 환경, 여성, 인권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은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로서 성, 세대, 인종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받게 하는 데 공헌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한국이라는 역사적 시공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식민지 공간에서의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끈질긴 전통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과 전쟁은 ‘과대성장한 국가’에 ‘성장지체된 사회’에 대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운동의 전개를 가로막는 배경이 되었다. 후발 자본주의의 상극적 발전이 초래한 계급대립, 노사갈등, 지역격차에 따라 분출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운동이 극우반공주의라는 냉전논리에 의해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30여년에 걸친 ‘유사민간화된 군부통치’는 모든 사회운동을 체제파괴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생, 지식인에 의한 민주화운동 내지 민족통일운동,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 의한 민중운동,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민운동, 그리고 인권, 환경, 복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은 후기-후발형 종속적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집합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르주아 혜계모니가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주도에 의해 추진된 대외의존적인 발전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인해 계급, 지역, 부문격차를 가져왔고, 그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저항은 권위주의적 조작과 억압에 의해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규모나 능력 면에서 사회운동의 성장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그러기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 기초한 구노동운동의

2) 사회운동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 최근에는 유럽의 신사회운동론적 관점과 미국의 자원동원론적 관점이 교차하고 있다. 신사회운동론이 시민社会의 다원화와 분권화라는 주체형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자원동원론은 조직이해에 따라 공공정책에 도전함으로써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전자로는 Melucci, 1989, Touraine, 1985, Rosenthal, 1992, Calhoun, 1993 등, 그리고 후자로는 Olson, 1965, Gamson, 1975, McCarthy and Zald, 1973, 1977, Tilly, 1978, McAdam, 1982 등 참조.

전개가 환경, 여성, 인권 등 신사회운동의 출현과 발생적으로 시기를 거의 같이 하였으며, 또한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국민의 기본권 쟁취 내지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녀 왔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³⁾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사회운동의 성장을 가져온 구미의 경험과는 달리,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아래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운동이 분출되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체제변혁적 성격을 지니는 제3세계 사회운동의 맥락에 위치 지워질 수 있다. 후기-후발형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하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된 가운데⁵⁾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미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아래 기성의 권력구조와 생산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제3세계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한국 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의 ‘제도화’에 앞서 신사회운동의 ‘동원화’가 이루어지는 발전경로를 밟고 있다. 계급타협을 가능하게 할만큼 노동, 농민, 빈민운동과 같은 구사회운동이 정당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되기 이전에 신사회운동이 환경, 인권, 혹은 여성의 영역에서 다계급적 동원화를 이끌어 내왔던 것이다.

제3세계에서는 시민권의 확립, 정치적 민주화, 불평등의 제거, 대외종속의 탈피 등이 사회운동의 공통된 과제로 등장한다. 아직도 반(反)자본주의 정서와 친(親) 사회주의 향수가 남아 있다. 이는 사회운동의 초점이 시민적 주체성과 다양성에 따

3) 물론 과거 19세기 영국 채티스트운동과 같은 구사회운동에서도 신사회운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나, 오늘의 환경운동이 20세기 초엽의 환경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구사회 운동을 이념지향, 조직구조, 성원성격, 동원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조돈 문, 1996: 18-21). 필자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속성이 주목한다. 이에 대해서는 Scott(1990: 19), McAdam(1996), Klandermans and Tarrow(1988: 23)를 볼 것. 이점에서 한국사회는 구사회운동의 ‘때이른 퇴조’와 신사회운동의 ‘때이른 등장’이라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옛’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의 과정이라는 세 계적 추세에 부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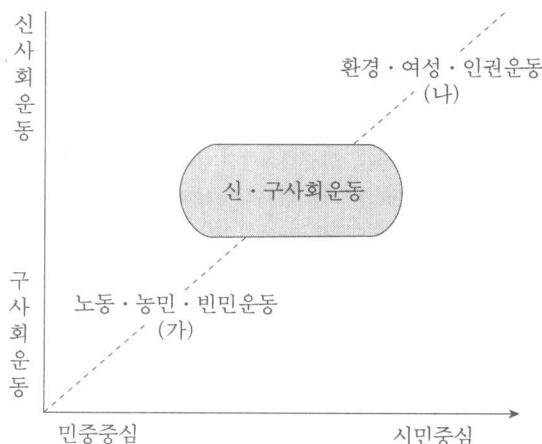
4) 물론 유럽과 미국의 경험 사이에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신사회운동이라 할 여성, 환경, 생태, 반전, 인권운동이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면 유럽은 반(反)자본주의라는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5) 더욱이 우리는 여기에 보태 ‘1민족 2국가 2국민’이라는 분단모순을 안고 있다.

른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개인적 가치에 맞추어져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 담론은 사회운동의 좌표로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성, 세대, 인종이라는 차이에 입각한 정체성이 신사회운동의 주요 주제인 것이다.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적 기획’이 지니는 병폐에 대한 근대적 비판과 아울러 탈근대적 지향이라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옛것이나 새것을 불문하고 근대적 병폐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질곡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근대의 완성과 초극이라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벡, 기든스, 그리고 래쉬(Beck, Giddens and Lash, 1994)의 성찰적 근대화론을 원용한다면, 후기 근대(‘복합 근대’)는 고사하고 초기 근대(‘단순 근대’)조차 완성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신구 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서로 갈라지기 보다 만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서 신구 사회운동은 불가피하게 전통과 근대의 한계를 동시에 초월하려면서도 반근대와 탈근대를 동시에 대안으로 상정하여 온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의 정향을 <그림 1>에서 적절히 살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의 주체로 기본권을 향유하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민중이 공존한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노동, 농민, 빈민운동이 구사회운동으로서 (가)의 부분에 위치한다면, 환경, 여성, 인권운동은 신사회운동으로서 (나)의 부분에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구 사회운동은 실제로는 그 중



<그림 1> 사회운동의 정향

간영역에 지금까지 병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경우 민중중심의 사회운동과 시민중심의 사회운동이 양립하면서도 이러한 신구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민중생존, 민족통일이라는 기본 방향에서 분기되기보다 수렴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즉, 민중운동=구사회운동, 시민운동=신사회운동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구 사회운동은 정치권 안에 대한 '해방정치'와 동시에 정치권 밖의 '생활정치'를 함께 추구해 왔다는 연속성과 유사점을 지닌다. 이러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와 공존은 다종다기한 시민사회단체의 출현과 아울러 이들 사이에 협력과 갈등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2) 사회운동의 현주소

한국의 사회운동은 시민도 없고 사회도 없는 곳에서 4·19학생혁명, 5·17민중항쟁, 6·10시민항쟁 등 주요 사례가 보여주듯이 역사의 분기점마다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후기-후발형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에 내재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비(非)대칭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저항과 돌파는 경이적인 사실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남북분단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폐쇄성, 강력한 국가주의, 불균형 성장전략, 장기간의 군부권위주의 통치 등 요인들로 인해 결빙되어 있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라기보다 신민사회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듯이 얼어붙은 사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신민'들을 중심으로, 계급갈등, 연고주의, 위계서열, 집단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국, 1998: 39-47). 이러한 신민사회로부터 시민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사회운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대략 6,159개에 달하는 비정부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한다.⁶⁾ 1987년 이후 급성장한 사회단체는 1996년을 고비로 3,800개에서 거의 두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는 직능, 공익, 이익, 관변 단체들을 모두

6) 공익지향의 사회단체로는 1903에 설립한 '서울YMCA', 1913년에 창설한 '홍사단' 등이 제1세대에 해당하며,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맹'을 전신으로 출발한 '환경운동연합', 1989년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연합', 1994년 설립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제2세대의 경우이다. 이러한 두 세대 사이의 엄청난 시간격차는 바로 한국 사회운동의 지체된 성장을 응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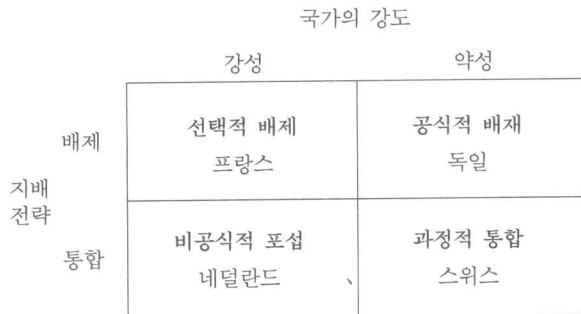
포함한다. 그러나 미등록 단체가 54.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절반 이상의 사회단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보편적 가치로서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지향의 시민 내지 민중 운동단체는 그 숫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단체의 과반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문화, 경제 관련 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단체당 평균회원수는 6284명, 산하단체수는 평균 15.09개, 상근활동가는 평균 7.76명으로 주로 30대와 40대 연령층이며, 평균예산액은 3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시민의 신문, 1999).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로 '백화점식 운동방식' 아래 여론몰이를 위해 '이슈파이팅'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정부의 곱지 않은 시선과 NGO에 대한 사회적 무지아래 '시민'은 없고 '운동'만 있었던 상황아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여겨진다.⁷⁾ 이러한 시민단체의 한계는 풀뿌리가 약한 처지에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주도적 시민운동에서 잘 드러난다. 시민참여가 낮은 가운데 대중적 기반의 취약은 중앙집중적 구조와 언론의존적 담론운동의 성격을 만들어 주고 있다. 더욱이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관료주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사이의 연결 부재, 중앙중심적 운동구조 등은 사회문제의 쟁점화와 상호연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국가의 제도적 강도와 사회운동에 대한 지배전략 사이의 관계를 통해 네 가지 유형의 시민사회단체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강한 국가의 전통아래 사회운동을 배제하는가 혹은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불란서의 '선택적 배제'와 네덜란드의 '비공식적 포섭'이 나뉘어지며, 약한 국가의 전통아래 사회운동이 통합되는가 혹은 배제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독일의 '공식적 배제'와 스위스의 '과정적 통합'이 구분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은 대체로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을 거쳐 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아래에서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선택적 배제'와 '비공식적 포섭'이 동시적으로 가해져 왔다고 사료된다. 민간정부에 들어와

7) 우리 나라에서 NGO전통의 부재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법·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출처: Kriesi, Koopmans, Duyvendak, and Giugni, 1995: 215

〈그림 2〉 사회운동에 대한 네 가지 지배전략

서 이루어진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의 부분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단체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협조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실제로 민간정부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새롭게 창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정치권 진입은 물론이거니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정부여당과 사회단체 사이의 정책협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정권에 들어와서 사회단체에 대한 포섭이 공식적인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시도된 바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택적 배제와 비공식적 포섭이라는 이중적 전략이 '제2건국'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운동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회단체들을 정부 주도아래 연합회로 동원하려는 일종의 '공식적 포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⁸⁾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제2건국 국민운동의 핵심단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를 동원하려는 김대중정권의 공식적 포섭의 강력한 의도를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공익지향의 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빼뚤어진 경제정의, 국민주권, 환경문제, 부정부패, 주민이해 등 국민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익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전

8) 대다수 시민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과 순수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에서 불참과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제2건국 국민운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체사회에 대한 ‘일반이익’의 차원에서 지역적, 부문적, 계층적, 집단적 ‘특수이익’을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물론 사회단체들마다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른바 ‘종합적 시민운동 단체’로서 경제정의실현연합은 중산층 중심의 다계급적 성격, ‘환경운동연합’은 전국민적 초계급적 특성,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계급연합적 성향 등 운동 노선과 전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종합적 운동경향은 한국정치의 낙후성이라 할 밑으로부터의 대의성과 위로부터의 책임성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기본적 시민권조차 확립되지 않은 여건에서 사회운동의 목표가 ‘국정참여’와 ‘권력감시’에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질적 민주화는 고사하고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범 자체가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와 정치사회에 민주화라는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운동인 것이다. 이는 제도정치의 부실과 운동정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정치지향성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일부 사회단체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를 전후로 한 정권도전형에서 정권친화형으로의 성격 변화도 그러한 정치지향성이 사회단체 본래의 개혁 목표와 혼돈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1) 국가,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는” (ruling and being in turn) 모순을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대의성이 위로부터의 책임성에 의해 뒤받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정치는 대의성의 왜곡뿐만 아니라 책임성의 방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아래 입법·행정·사법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임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기존의 정당정치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대의성의 대행’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조희연, 1999: 330). 이점에서 그들을 ‘준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박형준, 1993). 사회운동이 지니는 정치지향성은 우리만의 특징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입이 법·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⁹⁾ 그러나 미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정당과 정책연합도 추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심화 과정에서 서구나 미국의 경험은 사회운동의 현실정치 진입이 통합적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과 같은 구사회운동세력이 노동당의 형태로 피지배계층의 이해 대변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면, 환경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세력은 녹색당의 형태로 다계급적 공동이익의 증진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구사회운동이 정치체제 내부를 겨냥하여 권력획득을 시도한 반면 신사회운동이 그 바깥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정치과정의 제한성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례의 정당정치적 역학은 매우 다르다(Offe, 1990: 232-234).¹⁰⁾ 이는 개혁이나 혁명을 내걸은 전자의 경우가 거대정당으로 전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적극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고 성, 세대, 인종 등 차이의 정치를 지향한 후자가 군소정당으로 머무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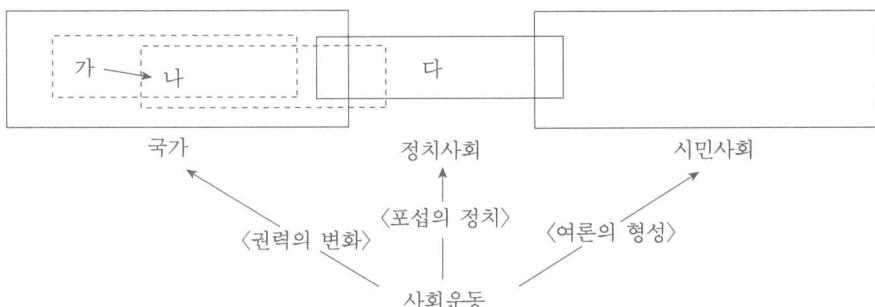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친 한국은 김영삼 정권의 변형주의적 ‘수직적 정권교체’와 김대중정권의 신변형주의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의 한계로 인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지연되고 있다.¹¹⁾ 최대주의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쳐

9)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맞이하여 5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에 의한 낙천·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선거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0년 2월 개정된 선거법(87조 선거운동금지조항, 59조 사전선거운동관련조항)은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내지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와는 달리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선거기간 전날까지 불허하고 선거운동 기간중 낙선을 위한 가두행진, 서명운동, 피켓시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10)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해서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수렴하기고 하고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점은 신사회운동을 근대화에 대한 ‘근대적 비판’으로 보는 Offe(1990), Habermas(1981)와 같은 입장과 ‘탈근대적 극복’으로 보는 Touraine(1995), Melluci(1990)와 같은 관점의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필자의 논의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자의적인 구분임을 밝힌다.

놓고라도,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출발인 선거민주주의의 단계에 놓여 있을 뿐 그 귀결이라 할 자유민주주의의 단계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Schedler, 1998). 즉, 민주적 헌법에 의해 보통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신진인사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여야정당에 의한 공생적 엘리트 담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이 차단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도 지역감정과 색깔론에 의해 회유될 만큼 민주주의의 행위규범을 충분하게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논지에서 <그림 3>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 공간을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¹²⁾ 국가는 정치권력이 자리잡고 있는 정점(頂點)이며, 시민사회는 사적(私的) 관계가 연합되고 분리되는 공간이며, 정치사회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경쟁이 벌어지는 정당정치의 영역이다. 우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국가에 복속된 정치사회의 이탈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가'에서 '나'로의 위치 변화), 정치사회는 시민사회 보다 국가 쪽에 편입되어 있는 형편이다(정상적 위치는 '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은 첫째, 시민사회에서 공공영역의 확장이라는 '여론의 형성', 둘째 정치사회에서 정당과 의회의 개혁이라는 '영향의 정치', 그리고 셋째, 국가의 영역에서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의 강



<그림 3> 국가, 정치사회 및 시민社会의 현주소

11)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3권분립이라는 '수평적 책임성' (horizontal accountability)과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수평적 책임성' (vertical accountability)이 결여된 '부분적 제도화' (partial institutionalization) 혹은 '지연된 민주화' (delayed democratization)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Donnell, 1996).

12) 정치사회에 관해서는 Stepan(1988: chap. 1), 최장집(1993: 381-383), 임현진(1993: 170-171), 윤상철(1998: 4-6), 손호철(1999: 263-265), 김수진(1999: 242-243)을 참고하라.

화라는 ‘권력의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한국의 사회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볼 때 ‘항의와 도전’ 보다는 ‘갈등과 협력’의 면모를 짙게 나타내고 있다(Giugni and Passy, 1999 참조). 이것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라는 군부권력과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라는 민간권력 사이의 권력성격, 사회연합, 계층기반 측면에서의 명백한 차이를 가르쳐준다. 사회운동은 자기유지적인 반복가능한 제도화 과정에서 흡수(cooptation), 포섭(inclusion), 그리고 일상화(routinization)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Meyer and Tarrow, 1998: 21). 민간권력의 태동이후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활동가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가 혹은 대표자로서 비상임 내지 상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야정당의 입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거나 또한 행정부의 장·차관 내지 고급관료로 선임되는 흡수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포섭의 수준에서 보면 제도정치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고 있다. 과거 상상할 수도 없는 청원과 소청 등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집회, 시위와 아울러 토론회, 공청회가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조개혁과 민생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이 제도정치의 차원에서 논의됨으로써 의제화와 법제화라는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의 자문과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기관 사이에 개인적, 운동적, 사회적 차원에서 항의와 협력이 교차하는 갈등적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셀로몬이 지적하는 ‘결사체적 혁명’이 휩쓸고 있다. 비록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도약은 지체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압축발전’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내걸은 가치, 규범, 정책, 제도 등에서 정부와 공중 모두로부터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보여온 시민 참여의 유도는, 갤슨(Gamson, 1975)의 표현에 의하면 사회운동의 ‘전면적 반응’(full response)을 가져왔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인권증진, 부패척결, 복지확대, 환경보호, 의정평가, 조세개혁, 정의실현 등에서 사회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정치세력화의 요인 분석: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역할, 대중적 기반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란 운동가들의, 개인적 혹은 집합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과정에의 직, 간접 참여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당의 결성이나 활동가의 기존 정치권 진출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로비활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영향력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¹³⁾ 이는 사회운동이 국민의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권력엘리트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Tilly, 1994: 7). 사회운동이 공공정책에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권력획득의 주체가 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익집단 이상의 정치지향성에 놓여 있다. 이점에서 사회운동은 공공선이란 명분아래 사회의 창조적 변형을 위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의식', 상대방을 규정하는 '적대의식', 그리고 기존의 것에 대안적인 사회의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전체의식'을 통해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경향을 지닌다(Touraine, 1985: 761).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해방정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¹⁴⁾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민주화 이후라 볼 수 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활동 공간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권 로비와 압력단체의 역할에 더 나아가 일부 활동가의 정치권 진출과 사회운동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당 결성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비판이 부정으로 인식되고 저항이 반역으로 간주되던 군부정치가 민간권력에 의해 밀려나면서 참여가 비판을 대신하고 협력이 저항과 병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운동의 실상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이후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숫자의 사회운동권 인사들의 국회와 아울러 기초·광역 단체장 및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를 목도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민중당과 개혁신당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정당 창당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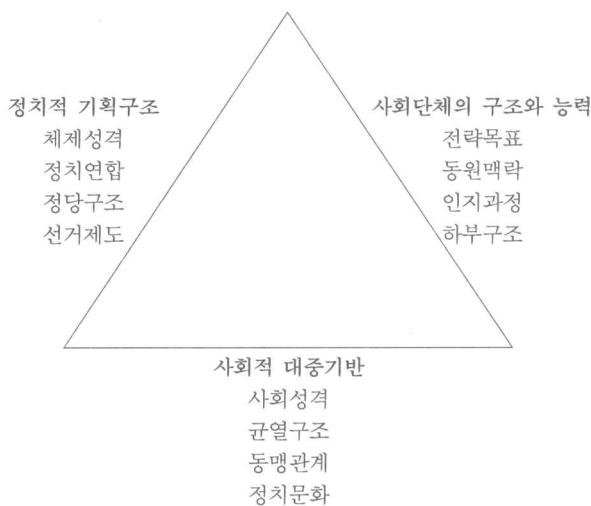
13) 이 글에서 정치세력화는 전자의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다.

14)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좌우세력의 정당결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이 위로부터의 동원이란 한계도 있지만 밑으로부터의 분출이란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15) 종합적 사회운동단체의 대표적인 보기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996년 총선에서 24명의 출마자 중 3명의 당선자를 내었고, '환경운동연합'은 1명의 출마자가 당선되었고, 그리고 참여연대는 2명의 출마자가 모두 낙선되었다(지방의회의 경우는 참여연대를 빼고 많은 숫자의 실무자와 회원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다수 활동가들이 기준 여야정당으로 ‘수혈’ 되는 제도정치강화용으로 역이용된 바 없지 않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전 여하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그 귀결이 앞으로의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독자 가능성 여부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유럽과 미국 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에서 다음 <그림 4> 같이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및 사회적 대중 기반을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¹⁶⁾ 여기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체제성격, 정치연합, 정당구조, 선거제도, 사회



<그림 4> 정치세력화의 조건

이 출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단체 소속의 상당수 활동가들이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16) 여기에 관해서는 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McAdam 1996, Clemens, 1997, 조대엽, 1999, 임현진·공석기, 1997, 송호근, 1998을 참고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국제적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세계사회론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NGO 사이의 연대가 국민국가 안에 테두리진 사회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지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단체의 구조와 능력은 전략목표, 동원맥락, 인지과정, 하부구조,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은 사회성격, 균열구조, 동맹관계, 정치문화 등으로 세분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거래를 통한 변형주의적 민주화 이행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이 뒤로 밀어지는 지연된 공고화(delayed consolidation)를 겪고 있다(임현진, 1998: 416; Mainwaring, 1992: 323; 윤상철, 1998 참조). 그러기에 정치체제는 개방되어 있지만 구체제의 인사들이 국가기구 안에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으며, 정당정치는 이념이나 색깔보다 종전과 같은 지역구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질적 사회단체들에 의해 상충하는 격전장으로서 분열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점에서 오늘의 한국은 ‘혼합체제’(mixed regime)에 가깝다 (Schmitter, 1997: 243-245). 즉, 권력본체로서 국가의 이중적 성격이 사회운동의 ‘압력정체’와 정당정치의 ‘선거정체’와 정치사회의 ‘대의정치’와 비정상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민간권력의 출범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못된다. 정치체제의 개방은 기성 정권엘리트들의 연고와 고객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인사충원과 권력분배를 한정시킴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등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이 정당성 확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영입과 충원은 오히려 사회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기성권력의 전술적 고려의 일환일 수도 있다. 대권장악을 위해 가능했던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 사이의 이종합종(異種合從)적인 지역연합은 인사개혁이나 체제혁파를 지체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에 바탕한 다당적 정당구조아래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은 의회활동을 위한 정치사회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현재의 정당구조와 선거제도는 ‘외생정당’의 경로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다. 일인보스아래 당내민주주의가 가능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인일표의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물려 있는 선거제도는 신진세력의 원내진입 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재정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종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풀뿌리 수준의 하부구조가 부실하다 보니 ‘이것저것’ 온갖 역할을 포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단체들의 전략목표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운동성원들이 전문성과는 다른 것에서 조직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경향을 냉는다. 사회명사들을 중심으

로 한 네트워킹에서 파생되는 관료주의와 편의주의 또한 대중과는 괴리된 엘리트 지향적 사회운동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성, 전문성, 독립성의 견지에서 볼 때 아직은 때가 이르다 하겠다.

결국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질에 달려 있다. 사회운동의 묘상으로서 시민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호혜-수원관계에 의해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시민사회는 현실정치에 대해 겉으로 부정하면서도 안으로 긍정하는 모순적 정치문화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시민의 공공의식이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난 ‘무정형의 시민사회’는 시민과 민중의 이해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적, 세대적, 계급적으로 균열되어 있다. 이러한 균열이 다양한 동맹과 갈등 관계아래 여러 차원에서 헤게모니 투쟁을 가져오고 있는 어지러운 형국이다. 여기서 정치세력화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민사회 안에서 사회권력의 임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정치에서 아무런 실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4. 사회운동과 정치참여: 한국의 사례

1) 민중당¹⁷⁾

배경. ‘민중당’은 1990년 11월 10일 창당되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합’에 의해 추진된 ‘민중의 당’(대표: 정태운)을 전신으로 1987년 대선 당시 재야의 중심 층이었던 ‘민족통일민중연합’의 독자후보진영의 인물들에 의해 ‘민중당’(대표: 이우재)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민중당의 출현은 1980년대 변화된 정치지형의 맥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아래 사회운동은 거의 폐쇄된 활동공간으로 인해 지하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서 혁명주의의 노선이 개량이

17) 이 부분의 논의는 당시 민중당 정책실 차장이었던 이범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나 개혁을 압도하게 되면서 사회운동의 주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계급지향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대규모 노동자계급의 등장은 사회운동의 중심을 노동부문에 옮겨놓으면서 공장 브나르도운동, 진보적 출판운동, 반미혁명론, 제헌의회론 등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학생운동 안에서 전개된 반미 '주사파'와 계급혁명 'PD파' 사이의 다툼은 사회운동권으로 파급되어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론'이라는 사회구성체논쟁으로 이어졌다.¹⁸⁾ 주사파가 대학사회를 장악하게 된 반면 PD파는 노동운동의 핵심이 되면서 사회운동권의 여러 세력들이 제휴하여 민중당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주체.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정치의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을 민주화 쪽으로 견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운동권은 군부권력을 청산하기 위하여 김영삼과 김대중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두고 민통련 안에서 '비판적 지지' (문익환, 임채정, 김근태, 이해찬 등), '후보단일화' (계훈제, 이부영 등), 그리고 '독자후보노선' (백기완, 장기표, 이재오 등)으로 삼분되어 있었다.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데 선도적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재야에 의해 전폭적인 신임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운동권은 부르주아적 성향을 갖는 김영삼=제도권 그리고 프티 부르주아적 기질을 보인 김대중=재야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권의 비판적 지지는 김대중, 후보단일화는 '한겨레민주당'¹⁹⁾, 그리고 독자후보노선은 '백기완선거운동본부'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운동권 중에서 공장으로 들어간 노동운동가들과 그 바깥에서 민중운동을 벌인 사회운동가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김영삼이나 김대중 휘하에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독자세력화만이 사회변혁의 지름길이

18) 전자는 미군철수를 전제로 반미자주 통일운동으로 나아갔고, 후자는 노동계급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주력했다. 오늘의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이끈 '민주노동자총연합'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었으며 그 모태는 공장 브나르도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 이점에서 '한겨레민주당'도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20)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이 주도한 학생운동권은 비판적 지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런 연고로 인해 독자후보노선은 소수의 PD파만이 가세해 있었다.

라 믿고 민중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민중당 창당에는 인민노련의 외곽세력인 민중의 당, 민통련의 독자후보진영, 학생운동권의 CA파 등이 연대하였다. 그러나 당 대표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1987년 대통령선거에는 독자후보를 내지 못하고 1988년 국회의원선거와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만 후보를 출마시킨 바 있다. 민중당의 공동대표로는 이우재가 선임되었고, 백기완과 알력을 빛었던 장기 표는 정책위원회장을 맡았다.

경과. 민중당의 이념과 노선은 맑스주의적 노동당이라기보다 수정주의적 사민당의 지향에 가까웠다고 판단된다. 정강정책의 경우, 경제운영에서 국유화 대신 사회화라는 완화된 표현을 쓴 것이나 재벌해체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한 것이 그 보기이다.²¹⁾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기본 조건이라 할 정치기회의 구조, 사회운동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기반의 측면에서 볼 때 민중당의 성공은 애초부터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기존 여야 정당에 대항적인 독자적 아젠다를 설정한 것을 빼놓고, 민중당은 그것을 주도한 사회운동권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기에 조직과 재정 역량이 극히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폐쇄되어 있는 정치체제아래에서 현실정치의 기득권을 뛰어넘어 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무망했던 것이다.²²⁾

민중당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서 태백지구의 기초단체의회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더욱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참패를 겪는다. 비록 이는 전체유권자의 1.5%라는 미미한 지지이지만, 그 이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전신이라 할 ‘민중의 당’이 얻은 0.3%에 비하면 조그만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중당은 총선에서 3%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현실 사회주의의 쇠퇴와 함께 국민적 관심조차 멀어지면서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함의. 민중당의 실험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지난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전 정치적 기회구조 자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념과 열정만으로는 사회운동의 정치참여 자체가 무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우

21) 민중당 정강정책의 입안에는 오세철, 박영은, 박형준, 김형기, 이병천, 정대화, 백옥인, 정태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흥미로운 점은 당시 노태우와 김영삼이 국고보조금을 통해 민중당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김대중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리 시민사회가 그 당시 실정에서 계급으로 포장된 민중주의적 노선에 대해 보수적 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며, 또한 현실정치에서도 이를바 민주화세력이라는 YS와 DJ로 상징되는 양김정치가 지역주의 기반아래 일종의 엘리트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운동정치의 제도화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당의 전통은 지금도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진영에 의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개혁민주당²³⁾

배경. '개혁민주당'은 1995년 12월 4일 창당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개혁시민연합'을²⁴⁾ 모체로 하여 출발한 개혁신당(공동대표: 장을병, 홍성우)과 민주당(대표: 김원기) 사이의 당대당 통합에 의해 개혁민주당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개혁민주당의 출현은 그것이 민주화 이후라는 점에서 민중당의 등장과는 정치지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는 변화된 여건에서 사회운동권의 일부는 김영삼 정권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민중당의 실패라는 경험 속에서 사회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덕택으로 민주가 반(反)민주를 제압한 상황에서 사회운동권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성이 퇴조하는 가운데 김대중의 정계복귀 선언으로 인하여 다시금 불거진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오너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에 따른 민주당의 분

23) 이 부분의 논의는 당시 개혁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김영진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

24) 당시 정치개혁시민연합에는 당시 사회운동권의 대표자라 할지도급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인제,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의 홍성우, '한살림'의 박재일, '우리밀지키기운동본부'의 정성현, '주거빈민연합'의 김영준, '나라정책연구회'의 서상섭, '홍사단'의 강태우 등이 보기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시민연합은 개혁신당을 통해 주력이 정치권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그 이후 이렇다할 사회단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당은 당시 3김으로 대표되는 봉건영주적 1인자배정당의 해악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국제환경의 변화아래 개혁민주당에 참여한 인사들은 주로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주의세력의 연합에 의해 세대교체를 통한 3김정치 타파를 목표로 내걸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진정한 사회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주체. 세 단계를 거쳐 출범한 개혁민주당에는 사회운동권의 여러 부분이 참여하게 되었다. 첫 단계인 정치개혁시민연합의 결성에는 사회운동단체(정성현, 최열, 박인제 등), 구민중당출신(장기표), 구한겨레민주당출신(이현배), YS·DJ 비판그룹(홍성우), 언론계(임재경, 성유보), 학계(장을병, 김대환, 임현진), 기업계(오호근) 등이 주도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인 개혁신당의 발기에는 앞의 인사들 중 일부만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운동단체, 특히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실무자들(서경석, 장신규, 송운학 등)과 2,30대 '젊은연대' (고진화, 이성현 등) 등이 가세하였으며, 그리고 셋째 단계의 당대당 통합에는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파' (이부영, 노무현, 김정길, 제정구, 이철, 유인태, 박계동, 원혜영 등)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혁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개혁신당이 실상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에 형태로 만들어졌다.²⁵⁾ 그러므로 사회운동권 출신의 개혁신당 세력은 민주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당내외 개혁에 성공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시민사회 안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있다는 장점은 또한 개혁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의 설정에서 지도체제와 공천제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과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할 수 있는 정강정책의 구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과. 개혁민주당이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대신²⁶⁾ 그래도 제도정당의 후광을 엎었다는 점에서 민중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9명, 전국구 6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럼

25) 사실상 김대중이 새로 만든 국민회의로 가지 않고 이기택의 민주당에 잔류한 국회의원은 30여명에 달했다. 신생정당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은커녕 지방의원 조차 거느리지 못한 개혁신당으로서는 부득이 당대당 통합이란 명분아래 결국 민주당에 개혁민주당으로 수용된 셈이다.

26) 개혁신당에 의해 원래 제시된 부동산실명제, 돈세탁방지법, 재벌소유경영분리, 행정실명제, 복식부기제도입, 시민소환제, 제정신청허용, 인사청문회도입, 상향식 공천제 등이 민주당과 통합이후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에도 불구하고 전체유권자의 11.2% 획득은 결코 작은 지지율 아니지만 30여석을 지니고 있었던 기존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참패임이 분명하다.²⁷⁾ 특히 개혁신당 출신 당선자는 불과 4명에 그쳤고,²⁸⁾ 민주당의 개혁파는 거의 전멸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개혁민주당은 이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구민주당 세력을 위시로 하여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신한국당과 합류하면서 해체되었다. 특히 구민주당 개혁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시도한 사회운동권은 대선 당시 김대중(김정길, 노무현 등), 이회창(홍성우, 이철 등), 기타 중립인사들(성유보, 박인제 등)로 갈라지면서 소멸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은 본래의 사회운동으로 돌아가 현재 활동중이다.

교훈.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중당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세력화의 기본 조건이 훨씬 나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과 사회적 대중 기반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여건에 있었던 개혁민주당의 좌절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정당구조와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체제개방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는 지역주의에 의해 쌓아진 높은 현실정치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주고 있다.²⁹⁾ 지역당 구도아래 움직이는 정당구조와 그것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혁파되지 않는 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개혁민주당의 좌절은 총선에서 대선 후보를 갖지 못하는 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정치문화의 대권향배적 특성을 엿보게 하여주고 있다.

27) 당시 신한국당은 34.5%(지역구 121명, 전국구 18명), 국민회의는 25.3%(지역구 66명, 전국구 13명), 그리고 자민련은 16.2%(지역구 41명, 전국구 9명)의 지지를 각기 받았다.

28) 개혁신당 출신으로 지역구 1명(장을병), 전국구 3명(김홍신, 이미경, 하경근)에 지나지 않았다.

29) 당시 정당별 득표율에 의한 전국구 배분은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전국구 배분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표의 지역적 구획화를 극복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도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진 정치 세력의 의회 진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5. 소결: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

오늘날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편으로 정치세력으로서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실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처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자리매김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실상과 허상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모든 여전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중당과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 매우 다른 정치지형에서 시도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자 세력화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성공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 기반 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는 규범적 판단 보다,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조적·행위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민주주의 선발국인 유럽과 미국의 경험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운동의 역학상 당연한 귀결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회운동의 초기 체제혁파가 후기 체제유지라는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소멸과 생성의 자연사적 과정을 밟는다면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그 산물임이 분명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현실조건과 관계없이 계속 시도될 것이며, 기존 제도정당을 넘어서는 독자정당의 출현은 사회운동의 조직 역량이 취약한 현실에 비추어 가까운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특정 부문에서 정체성을 갖는 '미니정당'의 출현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가치와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이다(임현진, 1999 참조). 이러한 중심지향적 사회에서는 제도정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 지역,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호혜-수원관계

에 의한 고객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현실정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라 할 소수 보스에 의존한 지역주의를 매개로 나타나는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적 담합구조’ (competitive collusion)도 그 결과에 다름 아니다(임혁백, 1997: 49).

우리의 사회운동은 두 차례에 걸친 민간권력의 등장 속에서 점차 체제내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김대중정권에 들어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해제모니 장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단체들 중 일부 직능, 이익집단의 대표자들은 정계진출을 위하여 그것들을 중간역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정치의 대리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기상조론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후발적 산업화와 기형적 민주화를 겪어 온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목표와 가치는 아직은 공공선이라는 전체이익의 조화에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전근대적 유제가 후근대적 모순과 근대적 과제라 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건설과 중첩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단체들은 정치세력화에 앞서 각기 자신의 전문성에 맞춰 정체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사회적 기반과 조직적 역량을 키우는 관건이다. 이점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현단계에서 ‘공동체적 체험’ (communitas)을 높일 수 있도록 오히려 ‘탈정당정치’의 틀에서 정치세력화를 겨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국(1998),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 · 양종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 김수진(1999), “한국정치 균열구조의 전개와 담합정당체제,” 〈역사비평〉, 제49호, 241-262쪽.
- 박형준(1993), “전환기 사회운동의 성격.” 임희섭 · 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413-434쪽.
-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송호근(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누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한국사회과학〉, 제20권, 제3호, 45-74쪽.
- 시민의 신문(1999), 《한국민간단체총람 2000》, 시민운동정보센터와 시민의 신문.
- 윤상철(1998), 《1980년대 한국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 “한국 사회운동 분석의 방법론적 재검토,” 〈경제와사회〉, 2000년 봄호 특별부록.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139-163쪽.
- 임혁백(1997), “지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치민주화의 과정과 문제점,” 최장집 · 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 21-60쪽.
- 임현진(1993), 《제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 “국가와 지배구조: 중심지향적 사회의 세.” 김일철 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441-445쪽.
- 임현진 · 공석기(1997),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50-122쪽.
- 조대엽(1999),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합의의 동학》, 나남.
- 조돈문 편저(1995),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 조희연(1999),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 320-346쪽.
- 최장집(1993),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 제6호, 310-342쪽.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lhoun(1993), “New Social Movements of the Early 19th Century,” *Social Science History* 17(3).
- Clemens, Elizabeth S.(1997), *The People's Lobby: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the Rise of Interest Group*

-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mson, William A.(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Dossey Press.
- Giugni, Marco G. and Florence Passy(1998), "Contentiou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Marco G. Giugni, Doug McAdam and Charles Tilly (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Rowman and Littlefield, pp. 81-108.
- Habermas, J rgen(1981), "New Social Movement," *Telos* 49.
- Klandermans, Bert and Sidney Tarrow(1988), "Mobilization into Social Movements: Synthesizing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e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 (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pp. 1-40.
- Kriesi, Hanspeter, Ruud Koopmans, Jan Willen Duyvendak, and Marco G. Giugni(1995), *New Social Movements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inwaring, Scott(1992),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 Donne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cAdam, Doug(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96), "Political Opportunities: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1996),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1993),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General Learning Co.
- _____(199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 A Practic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6).
- Melucci, Alberto(1990), "The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John Keane and Phillip Mier (eds.), *Nomads of the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Temple University Press.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1998),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 a New Century," in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O'Donnell, Guillermo(1996),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7(2).
- Offe, Claus(1990), "Reflections on the Institutional Self-Transformation of Movement Politics; A Tentative Stage Model," Russell J. Dalton and Manfre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 Olson(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The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Penny(1992), *Visioning Voices: Women on Power*, Aunt Late Books.
- Schmitter, Philippe C.(1997), "Civil Society East and West,"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vol. 2,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Schedler, Andreas(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s?" *Journal of Democracy* 9(2).
- Scott, Alan(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Unwin Hyman.
- Stepan, Alfred(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Addison-Wesley.
_____(1994), "Social Movements as Historically Specific Clusters of Political Performance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38.
- Touraine, Alain(1985),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_____(1995), *Critique of Modernity*, Blackwell.
- Turner, Ralph and Lewis M. Killian(1972), *Collective Behavior*, Prentice-Hall.

abstract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Political Party Building: A Korean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Lim Hyun-Chin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for social movements to become political forc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re had been several attempts by the activists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uil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such as 'Minjung' Party and 'Reform Democratic' Party. These attempts have not succeeded due to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limi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structural weaknes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 lack of social support from the grassroots. It is argued tha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sets constraints on new parties in terms of voting and election, that social movements have not grown enough to aggregate and represent various interests in civil society, and that the general mass are not yet receptive for the party building by social movement activist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has a long way to go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fore they can make independent political forces. It would be at present wise for them to try to be more formidable social forces outside the party politics.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Comparative Sociology, Political Sociology, Sociology of Development. Major Publication: *Understanding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Korean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E-mail: hclim@plaza.snu.ac.kr.